

“전두환, 광주학살 작전 2차례 회의 주도”

〈옛 도청 재진압 작전〉

5·18기록관 자료 공개...“5월 25·26일 회의서 지시·결정”

미국무부 비밀 문건·기무사 존안 자료도 관여 정황 드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엄군의 5·18민주화운동 진압회의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또 나왔다.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 진압 작전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지시와 결정을 내린 행적이 드러난 것이다.

22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전두환 행정적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전 전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이 1980년 5월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학살계획’인 도청 재진압작전(상무총정작전)을 점검한 뒤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12·12 및 5·18 사건’ 검찰 수사자료와 법원 판결문, ‘제5공화국 전사(前史)’, 미국 국무부 비밀문건, ‘12·12,

5·18 실록(재향군인회 발간) 등을 토대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행적을 재구성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25일 낮 12시 15분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계엄부사령관 등과 함께 상무총정작전 육본지침을 검토한 뒤 작전 개시일을 5월 27일 새벽 00시 01분 이후 전투병과교육사령관 책임하에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다음날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전남북계엄본소장)을 보안사령부로 호출해 재진압작전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당시 정 사령관은 침투시 군인들이 착용할 변장용 가발을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밤 9시께 광주로 내려왔으며, 앞서 소사령관은 오후 4시께 광주에 도착해 3·7·11공수여단 장병들을 격려했다.

5월 26일 오후 8시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한 비밀문건 ‘한국감시단 상황보고 제8호’에도 ‘한국군이 월요일 밤 야음을 틈타 광주로 진압할 것이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가 공개한 ‘증언 참고 자료’도 전 전 대통령의 광주진압작전 주도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 존안자료로 5·18 이후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됐다. 증언자의 신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5월 27일 00시 01분 이후 작전행동을 개시하도록 전교사령관에게 명령했다”는 대목을 보면 당시 소준열 전교사령관

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증언자는 5월 27일 최종 작전 결심 동기에 대해 “당시 서민층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의 극심한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5·18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전군 대병력으로도 진압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내 치안 공백 상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불순분자 내지는 북괴 무장 공비의 침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증언자는 문서 마지막 부분 ‘광주사건시각중 조치 및 결심에 이르기까지’ 항목에서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공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수경사령관과 함께 보안사령관(당시 전두환 장군)을 지목하며 “이들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충분한 사태 및 상황 분석과 대응방책을 논의하게 검토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전 22일 광주시 서구 영주동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광주시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참가자들이 율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선고 받은 56명

광주지검, 추가 재심 청구

검찰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관련자 56명에 대해 추가로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5·18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2명(사망 36명) 중 46명의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이날 초 56명에 대해 추가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남은 9명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다른 1명은 5·18과 무관한 범죄로 유죄 판결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재심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과거사 사과의 후속 조치로,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고도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1차 46명 중 39명의 재심이 개시됐으며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검은 2차 65명 중 광주구법 관할인 3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다른 지역 관할인 35명 중 26명도 재심을 청구했으며 9명은 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희동 광주지검 공안부장은 “재심 청구 대상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구금 일수에 따라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현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피고인과 그 가족의 권익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생 5명만 입건...의혹 남긴 문태고 시험문제 유출 수사

경찰 “교사 등 개입은 확인 못해”

경찰의 문태고 시험 문제 유출사건 수사가 학생들만의 소행으로 결론나면서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목포경찰청 문태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 유출사건(광주일보 2018년 10월 15일자 6면)과 관련, 학생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학생 4명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지난 9월 18일 학교 심화반 자습실 옆 교사 연구실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영어시험 문제 원안(11문제)을 사전 공모 아래 빼돌린 혐

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나머지 학생은 지난달 2일 해당 컴퓨터에서 문제 원안을 출력해 풀어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험 문제 유출에 교사 등 학교관계자가 개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한달여 만에 종료됐으나 교사 등 제 3자 개입·다른 시험에서의 시험지 추가 유출 등 의혹은 여전하다.

출제 교사가 시험문제 원안을 학생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컴퓨터에 비밀번호 설정도 없이 최소 2주 가량 보관한다. 이메일 유출과 원안 출력 사이(9월 18~10월 1일) 일부 학생이 “선생님 시험문제 관리 좀 잘하세

요. 다른 친구들이 볼 거 같아요”라고 주의했다.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점에서 학생들만의 소행으로 여기기엔 석연찮기 때문이다. 올 1학기 때도 심화반과 기숙사 학생들이 중심으로 영어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소문이 교내에 퍼졌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경찰이 합리적인 수사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저희도 쉽게 수궁가지 않지만 해당 영어교사는 ‘시험문제가 외장 하드가 아닌 바탕화면에 저장돼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5, 해질 17:23, 달돋이 17:42, 달질 06:48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대체로 맑고 강한 바람 불겠다.



◇바다 날씨

해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동~남동	0.5~1.0
	먼바다	북~북동	1.0~2.0	동~남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먼바다(동)	북~북동	1.0~2.5	북~북동	0.5~1.5
	먼바다(서)	북~북동	1.5~2.5	북동~동	1.0~2.0

◇생활지수

- ☀️ 높음
- ☁️ 뇌출중
- ☔️ 매우 높음
- ☀️ 감기
- ☀️ 미세먼지
- ☀️ 보통

◇물때

목적	간조		만조	
	07:05	19:38	01:41	14:20
여수	02:34	15:03	09:04	21:11

◇주간 날씨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	☀️	☀️	☀️	☀️	☀️	☀️
3/13	5/14	5/15	5/15	3/13	3/13	3/13

“어린이집 감사결과 공개”...광주시민단체 행정소송

광주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간 2500억원에 달하는 시민협회가 광주 어린이집 1200곳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감사한 보고서 등을 시민에 공개하라는 요구를 광주 5개 구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2일 어린이집 감사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광주 동·서·남·북·광산 등 5개 구청장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식약처 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마녀의 레시피’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마녀의 레시피’는 기준치(1g당 세균수 1000개)보다 3.7배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없이 이 제품을 소분해 스틱포장형으로 판매한 업체

이들 지자체는 어린이집 등 보육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곳으로 시민모임이 공개 청구한 2015~2018년 어린이집 감사 계획서, 결과서 등을 비공개했다. <광주일보 2018년 11월 7일자 7면>

어린이집 문제를 발견하고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시민모임은 규정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지원하는 공공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를 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의 도덕 불량증으로 이어지기 쉽고 감사 행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L갈라만’ (인천 소재)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329박스(8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에서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이 적발돼 사이트 차단 등을 조치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